

초등학교 개학...코로나 재유행에 학부모들 '전전긍긍'

광주 8월 들어 확진자 급증 추세... "밀집 생활에 감염될까" 불안 곳곳 마스크 쓰고 등교... 시교육청, 예방수칙 안내 등 대비 만전

"학교 특성상 교실에서 다같이 생활할텐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1일 오전 개학 첫 날을 맞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용봉초등학교 정문에서 아이를 등교시키는 부모들은 연신 아이들의 마스크를 고쳐 씌워주기 바빴다. 부모 손을 잡고 등교하는 저학년생부터 오랜만에 쓰는 마스크가 답답한 듯 연신 턱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재유행 중인 '코로나19'가 광주에서도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대형병원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고환자가 최근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첫째주(7월 1일~7일) 광주시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고환자는 0명이었지만 둘째주(4명)와 셋째주(7명) 점차 늘더니 7월 넷째주(7월 22일~26일)에는 26명으로 대폭 늘었다.

본격적인 증가세는 8월 초 시작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55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5일부터 11일까지는 64명, 12일부터 18일까지는 74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학교 앞에서 만난 초등학생 30여명 중 8명 가량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다. 지난해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이후 다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이다.

이창민(9)군의 엄마 김지연(48)씨는 "처음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개학날까지 코로나가 극성이라고 하니 마스크를 쓰워 등교를 시키고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와 함께 학교를 찾은 김모(47)씨는 "아이에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고, 혹시 감염되면 다른 친구에게 옮길 수 있다고 아이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는데다 학교가 밀집공간이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백일해, 수족구 등이 유행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북구 운암동 대자초에서 만난 이연화(39)씨는 아이를 등교시키며 "집에서보다 학교에 있을 때 코로나 감염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교실, 급식실 등 학교의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아이의 가방에 마스크 여러개를 넣어주며 "친구와 나눠쓰라"고 당부했다.

남구 봉선동 불로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준 백모(여·45)씨는 "요즘 코로나뿐 아니라 백일해, 수족구 등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다 같이 생활하다보면 전염병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신신당부 했다"고 토로했다.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이승숙(여·71)씨도 "손녀가 이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열도 심하게 나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마스크를 신경써서 씌워보겠



코로나 19 감염자가 늘어나는 등 재유행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광주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며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며 "그러나 한참 안쓰던 마스크를 쓰려고 하니 손녀가 답답해하고 안쓰려고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 시기를 맞아 각 학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각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하도록 권

고했다.

또 각 학교의 방역물품 비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초·중·고 각 5개교씩 총 20개교이며,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방역점검과 모니터링, 컨설팅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 유행 상

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낮았고 오미크론 변이종인 'KP.3'이 유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실내 환기 부족 및 휴가철 인구 이동 등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계모임 이름이 공산당? ...장난의 댓가는 '수사'

현수막도 내걸어...간첩신고 빗발

장난삼아 계모임 이름을 '공산당'으로 정하고 펜션에 현수막을 건 관계자들이 경찰과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산당 현수막을 내건 모임 관계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광양의 한 펜션에서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사진)을 걸고 모임을 열었다.

이 현수막의 사진이 SNS에 퍼지자 누리꾼들

이 간첩신고 번호인 '113' 등으로 신고를 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여수지역 가족단위 계모임 관계자들이 광양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계모임 여행에는 아이들과 어른까지 가족단위로 2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모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웃자고 현수막을 걸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모임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한 회원이



"회장의 말이 곧 법이 아니냐"며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제안해 모두 웃으면서 동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공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합장 선거 비위 제보 간부, 주유소 발령 부당"

광주지법 "보복 수단 징계 가능성"

농협 조합장 선거 비위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지점장을 주유소 소장으로 인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광주지역 농협 지점장 출신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농협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신규·탈퇴 조합원 6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의 감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합 상무가 사업을 하며 1665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 기부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이후 조합은 A씨가 "정당한 감사에 거부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규정 및 지시 위반, 조합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들어 면직하고 농협지점이 운영하

는 주유소 소장으로 전보했다.

A씨는 조합의 인사처분은 절차와 재량권을 위반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 조회 이유에 대해 내부 비위 사건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소명했음에도, 조합 측이 진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징계했다"면서 "A씨가 조합장의 범죄행위를 제보한 데 대한 보복 수단으로 징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2022년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확인한 조합이 그동안 조처를 하지 않다가 조합장이 기소돼 선고기일이 정해지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인사명령을 준비했다"며 "조합은 A씨가 조합명예를 실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인사명령을 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A씨가 제보한 농협조합장 등의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론조사 왜곡 게시 혐의...경찰, 김문수 의원 불구속 송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방송사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3월 순천호 당사 예비후보는 "김 의원이 SNS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

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